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 민선 5기 충청남도의 내발적 발전을 중심으로 -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오늘날 지구는 세 가지의 지구적 위기(global crisis) 즉 경제위기, 자원위기(석유위기와 식량위기) 그리고 기후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위기들은 서로 연관되고(interrelated), 융합되어(converged) 상호 증폭 시키고 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모든 지구적 위기의 배후에는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바로 이 초국적 자본(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 석유 메이저, 초국적 애그리비즈니스 등)의 무한경쟁과 탐욕이 지구적 위기의 주범이다. 지구적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 동맹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찾기 쉽지 않다.

지구적 위기는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훨씬 심각하다. 자본시장은 국제적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무역의존도가 100%를 초과하여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음에도 재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초국적 자본은 국민의 삶과 경제주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을 전방위로 체결하고 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산업생산과 국민들의 의식주를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화석연료 없이는 유지 불가능한 상태다. 식량자급률이 25%에 지나지 않는 나라가 다가올 식량위기를 알면서도 국내생산은 줄이고 글로벌 식량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초국적 자본의 탐욕에 맡기고 벼랑에 떨어질 날을 기다릴 수는 없다.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시민의 힘에 의한 지역화 혹은 재지역화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선 5기 충청남도의 내발적 발전을 그러한 움직임에 광역지자체 차원의 동참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도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충남 경제

지역내총생산(GRDP) 최근 10년간 연평균 9.1% 성장, 일인당 GRDP 3338만원(2009년) 전국 평균의 1.5배로 전국 2위. 충남경제의 화려한 외양이다. 반면에 충남 도민의 삶은 이러한 외양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최근 10년간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가계 채무 연평균 증가율 21%로 전국 3위, 일인당 소비 전국 11위, 취약계층 비율 전국 1위이다.

충남에서 이처럼 성장과 삶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남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본사를 수도권에 둔 재벌계 대기업에 의한 전자, 자동차, 제철, 석유 화학 등 수출산업이다. 천안아산시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당진시의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현대오일뱅크, LG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 KCC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충남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7.8%에서 2009년에 50.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충남경제는 수도권 재벌계 수출대기업 의존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이 적지 않다. 첫째, 이들 대기업에 대한 충남 경제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수출대기업과 그 하청기업의 주된 생산거점인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 충남의 북부권 4개시는 충남 전체의 지역내 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특정 대기업이 소재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예를 들어, 천안아산시의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은 14%를 차지하는데, 하청업체의 고용을 포함할 경우 천안아산지역의 고용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아산시의 경우 시세(2011년 4월 현재 1,304억8천만원) 가운데 삼성전자 38.4%, 삼성코닝 25.8%로 삼성이 64.2%를 차지하고 현대자동차 2.6%, 현대 모비스 1.7%로 현대가 4.3%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 두 그룹이 아산시 시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지역경제 전체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이들 대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인가. 이미 서산 대산석유화학 산업과 당진의 제철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내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일인당 GRDP 1위인 울산 지역경제가 현대자동차의 감산 등으로 최근 어려움에 빠진 것은 반면교사다.

둘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9.4%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76.5%(전국 3위)로 급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충남지역의 수출 및 생산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 이후 2008년 12월 충남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1% 감소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7.9%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셋째, 지역 생산이 지역 주민의 주머니(소득)로 들어가지 않고 역외에 유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 2009년 중 충남지역 지역민 총소득은 40.9조원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 65.1조원)의 62.9%이다. 이는 2000년의 72%에 비하면 9.1%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즉 지역 내 총생산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 대비 총소득 비율에서 충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특히 1인당 개인 가처분소득은 1,124만원으로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3338만원)의 33.7%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생산과 고용의 괴리가 매우 크다. 충남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2009년)은 생산액 기준으로 50.7%이지만 취업자 기준으로는 17.0%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제조업의 경우 생산액에 비해 취업자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북부권의 제조업이 LCD,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자본집약적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피용자보수로 배분되는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성장이 제조업에 의해 견인된 반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부진하여 이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제조업이 발달하면 그를 뒷받침할 정보통신, 법률, 회계,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가 발달하여야 하지만, 충남의 제조 대기업은 분공장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의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충남에서는 창출되지 않는다. 충남의 서비스업체의 거의 절반

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서비스 업체이고, 지식기반서비스 업체수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섯째, 충남도 내의 권역(지역)간 격차가 매우 심하다. 충남 경제의 성장이 북부권에 집중된 이유는 9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증설 규제 등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수도권에 인접한 동 지역으로 집중 이전된 데 주로 기인한다. 따라서 북부권 경제의 성장은 행정구역 상으로는 충남경제의 성장으로 나타나지만, 엄밀히 말하면 수도권경제의 외연적 확장이며 수도권 경제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마디로 충남경제라 해도 북부권과 남부권의 경제는 전혀 다르다. 2009년 충남 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의 87.9%가 북부권에서 창출되는 반면에, 남부권은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전통적 산업인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충남의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의 농림어업 비중을 보면 아산 0.8%, 천안 1.6%, 서산 4.7%, 당진 4.8% 등 북부권은 매우 낮은 반면에 남부권의 청양은 34.4%, 부여는 29.8%로 1960-70년대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다르지 않고, 서천 17.9%, 보령 17.5%, 태안 15.5% 등은 1970-80년대의 산업구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권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 충남 북부권은 2000-2008년에 연평균 12.3%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에 남부권의 성장률은 5.3%에 그치고 있다.

여섯째, 중화학공업과 화력발전소의 밀집으로 인해 생태계 및 환경 파괴가 심각하여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의 일인당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15.21톤으로 전국 평균 3.34톤의 4.6배로 전국 1위이고, 소득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51톤/백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7배이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50.5%가 위치해 있고, 발전량의 약 70%는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지역의 석유화학단지 및 제철 등에서 사용한다.

충남 경제는 한국경제의 미니어처: 신자유주의와 지역의 불균형 심화

재벌계 수출 대기업에 의존하는 충남경제, 수출은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해도 해도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은 늘지 않고 빚만 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충남 경제, 이는 재벌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미니어처이다.

2001-2010년에 한국의 수출은 3.1배 증가하고, 그에 힘입어 국내총생산은 2.1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것은 재벌그룹의 대기업들이다. 특히 5대 재벌그룹의 성장이 눈부시다. 국내총생산 대비 5대 그룹의 매출액은 2001년 49.5%에서 2010년 70.4%(계열분리 친족 포함)에 달한다. 재벌들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 상위 2,000개 기업의 매출액은 2.1배 증가하였지만 일자리는 2.8% 증가에 그쳤다. 뿐 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른바 쓸 만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비정규직만 급증하였다. 빈곤율은 10.5%에서 15.3%로 증가하고, 지니계수는 0.299에서 0.311로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10년간 2배로 늘어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의 심화가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경제의 자화상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일극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종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의 49.5%, 100대기업 본사의 92%, 지역내 총생산의 48.4%, 지역민 총소득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본격 편입된 사실에 주목한다.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우리나라가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정책을 수용하면서 한국경제가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된 것은 맞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시장근본주의로 이해해서는 오늘날의 사태를 설명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 배제 혹은 최소화 즉 경제 자유화와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지출의 삭감과 감세,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권의 실제 경제 정책을 보면 결코 국가의 개입이 줄지 않았고, 반복되는 경제위기 때마다 더 강력하고 빈번하게 개입하였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초국적 대자본 본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는 시장의 강자(대자본)를 위한 이데올로기이고, 시장주의 정책 즉 경제자유화,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감세, 규제금융 등의 최대 수혜자는 말할 나위 없이 대자본이다. 반면에 노동자계급과 서민대중은 비정규직화와 복지지출의 축소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세계화도 대자본의 경제활동 무대를 자유롭게 확장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자본의 활동이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세계화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민경제’의 의미도 퇴색된다. 초국적 자본의 입장에서 세계경제만이 존재할 뿐 국민경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초국적 자본이 성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일자리나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 이는 70-80년대에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난 반면,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초국적 자본(재벌)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 삶이 괴리를 보이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지역경제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재편된다. 세계화 특히 금융세계화는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지원할 고도의 기업서비스와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예, 서울)를 필요로 하고, 세계도시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세계경제의 지역적 네트워크에 포함된 일부 지역(예, 충남의 북부권)은 성장하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지역은 배제되고 주변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하나의 도시나 지역 내에서도 진행된다(예, 구도심의 쇠퇴). 특히 세계화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예, 농어업)과 그러한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킨다.

신자유주의는 퇴조하는가?

승승장구하던 신자유주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중적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창설 이후 일관되게 시장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해왔다. 그런데 2012년 다보스 포럼에서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나는 자유시장제도의 신봉자이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다.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 시장은 사회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 철 지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위기로 내몰았다. 단순한 시스템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철 지난 자본주의란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다. 슈밥보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한 사람은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자유방임주의가 지배하던 자본주의 1.0, 케인즈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를 자본주의

2.0, 1970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를 자본주의 3.0이라고 하고, 금융위기 이후 오늘날에는 ‘적응성 혼합경제’인 자본주의 4.0 즉 정부와 시장의 일방적 추종주의를 벗어나 정부 개입과 자유시장의 동반자적 관계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연 신자유주의는 퇴조한 것인가. 신자유주의의 시장 이데올로기는 퇴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초국적 자본의 지배라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클라우스 슈밥의 인재주의나 아나톨 칼레츠키의 ‘따뜻한 자본주의’로는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을 극복할 수 없다. 초국적 자본은 단순히 경제를 지배할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지배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재벌(초국적 자본) 지배질서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재벌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국적 자본의 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국내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정책이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거버넌스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대안적 경제가 필요하다.

재지역화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글로벌(global)에서 지역(local)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지역민의 필요(needs)를 지역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경제의 건설이 필요하다.

지역은 사람들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경제과정의 기초단위이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토지, 자본, 에너지, 노동 등 지역자원에 기초하여 생산된다. 지역은 자급을 기본으로 하지만, 남거나 부족한 것을 타 지역과의 거래관계로 보완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립적 존재이다.

지역은 사람들이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고 서로 연대하며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위는 선형적으로 혹은 행정구역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자신의 필요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협동하는 범위(공간)로서 주민 스스로가 정할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은 주체적 존재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역 간 거래가 확대되고 국민경제적 규모의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경의 아무런 제약 없는 경제활동이 강조되면서 지역이나 지역경제는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다. 경제의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되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자립성은 상실되고,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종속적 일 구성 부분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상품소비와 생활양식이 획일화하고 다양한 지역적 생활양식을 쇠퇴시키고 삶의 질을 희생해왔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환경의 질이나 생활의 질과 연결된 경제발전이 요구되면서 지역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화(localization) 혹은 재지역화(relocalization)는 주체적, 자립적 존재로서 지역의 의의를 재인식하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민의 삶에 기여하는 자립적 경제구조를 형성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화 혹은 재지역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 전략이 내발적 발전이다. 내발적 발전은 1970년대 말 외부자본의 유치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한 외생적 개발이 실패하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발전 전략이다.

내발적 발전은 발전의 동력을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구한다(driven within). 즉 지역 자원(자연, 사람, 자본, 문화, 환경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 순환(보전) 되도록 한다. 그러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지역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부터 동시에 영향을 받고, 지역 밖과 상호작용한다. 발전동력은 지역 내부 뿐 아니라 지역외부로부터도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발적이나 외생적이나 하는 대립적 혹은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지역(local)과 지역 외부(extra-local)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발전의 전과정에서 지역이 주체성을 갖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의 능력 즉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발전에서 내부와 외부의 연계를 중시하여 신내발적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외부요소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발전의 전 과정은 지역의 잠재력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는 점에서 내발적 발전과 차이가 없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주도의 상향식 발전, 지역민의 참여와 협동, 자치를 중시한다. 특히 참여는 지역발전의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다.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는 지역발전의 수단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정치적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역의 의존성이나 주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간주된다.

외생적 개발은 경제성장을 최우선한다. 그러나 경제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기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관점만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경우 지역의 문화, 공동체성, 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파괴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내발적 발전은 물질적·경제적 발전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공동체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integrated development)을 추구한다.

내발적 발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내발적 발전의 국내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부탄은 내발적 발전을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있는 인구 70만의 작은 산악 국가이다. 부탄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국민소득이 20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이다. 부탄은 1972년 이후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을 국정의 기본철학으로 하고 있다.

부탄의 4대왕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는 각국의 정부와 국민이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편안한 삶을 살고,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 빈곤, 소외 속에서 살고 있으며 성장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민총행복(GNH)이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중요하다”는 국정 철학을 발표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 정책은 제5대 국왕을 거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부탄은 국민총행복을 위해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채택했다. 첫째,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발전, 둘째,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 셋째, 부탄의 전통과 정체성을 실현하는 문화의 보전과 증진, 넷째, 앞의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그것이다. 부탄의 이러한 국민총행복 전략은 내발적 발전 전략과 기본적으로 일

치한다. 내발적 발전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통합적인 발전’을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초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부탄이 내발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해서 외부와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원조는 부탄경제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고,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외부와의 관계가 부탄 문화와 환경의 보전과 함께 추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탄 정부는 국민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수준을 구성하는 9개의 규범적인 영역(심리적 웰빙, 건강, 교육, 시간 활용 및 균형, 공동체의 활력, 전통과 문화의 다양성, 생태다양성 및 복원력, 생활수준, 굿 거버넌스)을 설정하고 72개의 국민총행복 지표를 개발, 2008년부터 국민총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민총행복지수는 2년 단위로 조사해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정책의 계획, 정책결정, 수행과정에 국민총행복(GNH)을 반영하고 모든 국가정책이 국민총행복에 적합한지를 스크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선5기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 강화

내발적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력의 함양이다. 지역력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나 기업을 비롯한 지역의 구성원이 스스로 그 문제의 소재를 인식하고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주체와 협동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이다. 민선5기 충남도는 내발적 발전을 위한 지역력 강화를 위하여 3농혁신, 지역(기반)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육성, 사회적 경제부문의 육성, 지역간 다중적 연계협력 사업, 소프트 파워의 강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지역리더의 양성 및 도민의 역량 강화, 지방분권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가운데서 충남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3농 혁신이다. 충남경제의 기초인 농어업과 농어촌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도농간 양극화 심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충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충남도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는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3농 혁신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충남도는 도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2011년 1월부터 3농 혁신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공무원, 전문가, 현장 농어민 등 연인원 2천명이 참여하는 수십 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8월말에 '3농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민과 전문가, 소비자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3농혁신위원회와 3단 8TF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3농 혁신계획은 중앙정부 농정의 경쟁력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농어업인, 도시민, 소비자가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도민·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실현,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 만들기 등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친환경·지역순환 식품체계 수립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3농 혁신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현장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충남도 독자의 3농 혁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3농 혁신 대학

은 매월 마지막 금~토에 1박2일로 도지사가 교장으로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의 특강과 현장 농어민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1월의 쌀산업발전, 2월의 농촌관광체험, 3월의 농업협동조합 등 이미 끝난 과정이외에 산림자원, 선진축산, 청정수산, 친환경리더, 소비자, 농어업6차산업, 마을가꾸기, 착한 소비, 친환경급식, 경영인 혁신 등의 과정이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2012년의 성과를 봐서 내년 이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는 오늘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농어민의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소비자,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표하는 2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농어촌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농어업·농어촌 가치 및 역할 홍보,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생활운동,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남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은 사회적 경제의 육성이다. 2007년 사회적 기업법에 의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인증과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경제가 지니는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소극적 의미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기능하지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경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주요 부문을 구성하고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경관의 유지·보전, 도농교류 활성화, 자원순환형 농업생산, 로컬푸드 운동, 지역개발 등 농촌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충남도는 2011년 1월 도청에 사회적 경제 TF팀을 설치하고 도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경제의 민간 거버넌스 기구인 사회적경제정책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 지원 사업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이외에 충남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의 수립,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및 도민 교육에 사회적 경제 과정 개설, 충남사회적 경제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권역 간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회적 경제의 이해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 개최, 사회적경제 전략기획사업 발굴 및 지원, 사회적경제 전시판매전 개최,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2012년말에 발효되는 것에 맞추어 사회적 경제정책을 한층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충남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추진기획단을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사회적 경제 TF도 사회적 경제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기업과 외자 유치를 내발적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민선4기까지 충남도정이 국내외 자본유치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민선5기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

는 비판도 있다. 민선5기 충남도가 자본유치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많은 기업과 공장이 유치되었지만 지역민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국내외 자본을 무조건 유치할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기업종사자 지역정착화로 내발적 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생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상생 산업단지’란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공간적으로 연계돼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3세대 산업단지를 말한다. 상생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충남에 진출한 기업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직주근접으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기업근로자의 지역 내 거주로 수도권 외부 지역으로 소득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아 생산성 증대에 걸 맞는 지역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상생산업단지의 추진정책은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발인구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정주대책(주거, 교육, 복지 등)을 검토·심의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기존의 산업단지는 권역별, 시군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청, 대학, 기업 등과 함께 협의하여 거점도시(7개 권역 26개 도시)와 연계, 정주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필요한 연간 2-3개 사업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상생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에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산업단지 조성시 정주여건 검토를 위한 심의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발적 발전을 위한 충남도의 또 하나의 전략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정치경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는 형식적이며,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된 권한을 지방에서 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2012년 5월 4일 발족)를 설치하여 분권자치, 주민자치, 지방재정, 지역발전의 네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충남도 사이에도 중요하지만 충남도와 16개 시·군 사이의 수평적 분권도 중요하다. 도에 비해 기초지자체 전체 예산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도의 사업이 시군을 통해서 집행되고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초지자체이다. 따라서 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능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도와 시·군) 사이의 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이다. 실제로 권한이 지방에 주어지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지방자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충남도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직화하고, 정책입안단계부터 집행, 모니터링(평가) 단계까지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근린자치와 평생교육시스템의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민선 5기 충남도의 도전: 성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을 추동하는 힘은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이다.

민선5기 출범 당시 내발적 발전은 도의 공무원이나 도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다. 심지어 충남의 발전전략을 구상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대부분의 연구원조차 내발적 발전을 생소하게 받아들였다. 과거 도정이 국내외 자본과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그 과실이 넘쳐(이른바 trickle down) 지역민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외생적 개발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충남도정의 기조가 외생적 개발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 때문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충남도는 지역 GRDP와 GRDP 성장률이 전국 1,2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투자와 경제발전의 중심지가 된 지 오래됐지만 지역의 공장과 기업의 수는 증가한 반면 주민의 실질적 소득은 늘지 않고 있어 지역의 내실 있는 경제발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충남도가 3농혁신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도 외부 뿐 아니라 도의 공무원 내부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도지사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당장의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지사가 바뀌면 공무원의 생각이 바뀐다. 도정의 기조가 바뀌면서 도의 정책에도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3농혁신, 사회적 경제, 상생산업단지, 거버넌스 행정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을 이론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도의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지사와 함께 원장이 바뀐 것을 계기로 내발적 발전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1년 1월 농촌농업연구부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6월에는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내발적 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농혁신,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로컬푸드, 에너지 자립마을, 고용개선, 지역균형발전, 기업유치정책의 개선,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리더 및 인력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내발적 발전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각종 워크숍과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남연은 2012년의 연구방향을 ‘행복충남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연구’로 정하고, ‘충남도민행복도 제고’,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3농혁신 실천전략 수립’, ‘지방분권 기반 강화’, ‘정부정책 선도·지원’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내발적 발전을 위한 민선 5기 충남도의 도전은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내발적 발전은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민선 5기 충남도정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더욱이 내발적 발전은 외생적 개발과 달리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발적 발전에 기초하여 충남도정의 흐름이 바뀌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다.

충남도가 도지사를 중심으로 내발적 발전에 힘쓰고 있지만 그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내발적 발전을 추동할 지역의 주체역량이 미약하다. 도의 공무원과 도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성장제일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뭘니 뭘니 해도 뭘니(money)가 최고이고, 경제가 성장해야 살기 좋아지고, 성장을 위해서는 바깥에서 자본이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경제의 명암이 수도권 재벌그룹의 수출대기업

에 의해 좌우되고, 충청남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다. 심지어 지역발전에서 도민의 행복이나 공동체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배부른 소리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성장제일주의는 지역의 성장세력 연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내발적 발전을 뒷받침할 시민사회의 힘은 미약하다. 뿐 만 아니라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은 도 차원의 정책이지 아직 시군 단위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 특히 보수적인 자치단체장들이 통치하는 시군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의 외생적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미성숙한 지방자치 현실로 인한 충남도의 한계가 내발적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21년에 달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구조로 인해 도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행정 체계에서 도의 위상이 애매하다. 2010년 충남도의 예산을 보면 자체 재원(지방세 23.5%+세외수입 4.5%)은 28%에 지나지 않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16.9%+국고보조금 55.1%)이 72%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를 세출 측면에서 보면 전체 세출에서 기초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비중이 70.2%를 차지하여 보조사업비 이외의 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적 지출을 제외하면 본청 고유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10년 충남도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충남도가 사용할 수 있는 투자가용 재원은 전체의 10%도 안 되는 3천억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서 계속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800억원 남짓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정도의 가용재원으로 충남도가 내발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가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수립한 예산도 실제 집행은 거의 대부분 시군이 담당하고 충남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거의 없다. 충남도가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3농 혁신의 예를 들어보자. 2010년 충남도 전체의 농림수산사업비는 1조556억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절반은 국비이고 그 가운데 충남도의 도비는 1,2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1,200억원 가운데 600억원은 시군에 이른바 국비 매칭으로 사용되고, 600억원에 대해 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지만 그 집행은 시군이 하고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25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는다. 내발적 발전은 글로벌 경제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초국적 자본보다는 지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초국적 자본(재벌)에 의해 좌우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역경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 대표적인 것인 무차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자본(재벌)에게는 이윤증대를 위한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을 가져다주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어업, 중소기업에는 커다란 타격을 준다. 충남도는 3농혁신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산물시장개방이다. 또한 규제완화로 인해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할 뿐 아니라 수도권 대기업들이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 종합병원, 대학 등에 까지 진출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개인병원, 제조업체 등 전통적인 지역경제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충남의 내발적 발전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 전망을 밝다고 할 수 있다. 내발적 발전을 위한 국내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있고,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

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삶의 질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도 내발적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한다. 최근 OECD는 34개 회원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인 ‘행복지수(Better Life Initiative)’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6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의 의식과 국가정책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말 대선 이후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지방분권이 진전된다면 내발적 발전의 여건의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의 개선만으로는 충남의 내발적 발전을 낙관할 수 없다. 내발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은 도지사의 리더십에 의해 추동되고 있지만, 도지사가 바뀌면 언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단체장에 상관없이 내발적 발전이 안정적으로 도정의 기조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연합세력을 제어할 시민사회 세력의 성장, 그를 뒷받침할 도민의 의식변화와 자치 역량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민의 자치역량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민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광역자치체인 도의 역할이다.

내발적 발전은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성과를 내야만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내발적 발전을 통해 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지역의 환경이 좋아지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은 이제 걸음마를 떤 단계이다. 내발적 발전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다양한 정책개발,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혁신,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한데 어울린다면 충남도의 내발적 발전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끝>